

2018

Report

of Trend

2018

정부 및 수도권 지자체  
규제완화 정책  
동향보고

2018.01. part1 제 89 호

# Contents

## I . 정부 추진동향

1. 대통령 · 총리 · 경제계 모두 규제개혁 강조하지만...재계 신년회에서 ‘규제’ 언급도 안 한 여야 대표 3
2. 정부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백지화 4
3. 민주, 규제프리존법 대안 '4 대 패키지법' 준비..."2 월 국회 처리" 5
4. 김동연 “일자리 위해서라면 패키지로 규제 풀것” 6
5. 정부 균형발전 뒷받침할 균특법 개정안 '낮잠' 7

## II . 수도권 추진동향

1. 말로만 떠드는 기업유턴 정책 ... 일자리 300 만개 해외에서 떠돈다 8
2. 인천시, 수도권 규제완화 최대 수혜지로 부상하나 9

## III . 비수도권 ( 지역 ) 추진동향

1.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대신 산학연 클러스터 내실화 주력 예상 10

## 1. 대통령 · 총리 · 경제계 모두 규제개혁 강조하지만..재계 신년회에서 ‘규제’ 언급도 안 한 여야 대표

## 01

## 개요

보도형식	언론기사	보도일자	2018.01.03
보도대상	전국	보도매체	중앙일보

## 02

## 주요내용

■ 새해를 맞아 청와대와 정부, 경제계가 한 목소리로 “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” 고 강조

- ‘2018 년 경제정책방향’ 이 발표된 지난달 27 일 문재인 대통령
  -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라며 과감하고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
  - 그러면서 법으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‘네거티브 (negative) 규제’ 방식과 특정 사업 분야의 규제를 일괄적으로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 (Sand box) 도입 필요성을 거론
- 이낙연 국무총리 지난 2 일 정부 시무식
  - 대담한 규제혁파가 필요하다며 규제 샌드박스가 새해 벽두부터 구체화되길 바램
-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: 틈날 때마다 규제혁신을 언급
-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재계의 발언 수위는 한층 더 높음
-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기자단과의 신년 인터뷰
  - 기업 규제 수준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보다 높은데도, 국회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직격
- 정세균 국회의장 최근 언론 인터뷰
  -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새 시대를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할 때라며 여야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지만 여야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음
- 특히,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·정부와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규제 문제와 관련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음
- 여야의 더 큰 모순은 서로 자신이 발의한 법안은 필요한 법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상대방이 발의한 법안에는 소극적이라는 점
- 규제 샌드박스 도입 논의는 문 대통령이 불을 당김
  - 4 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이 열린 지난해 10 월 “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다” 며 직접 규제 샌드박스를 언급했기 때문
  - 이후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도 발의
- 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
  -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면 규제 프리존이든 규제 샌드박스든 협조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규제 프리존에는 반대하면서 규제 샌드박스는 추진하는 민주당의 이분법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
- 야권에선 청와대의 접근법을 문제삼고 있음
  - 지난해 정기국회 때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한 여야 협상이 진전을 보였지만 지난해 11 월 비공개로 열린 당·정·청 회의에서 청와대가 법안 처리에 난색을 보여 협상이 가로막혔다는 것
  - 당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: 민주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지만 당·정·청 비공개 회의에서 ‘재벌 특혜가 우려된다’ 며 청와대의 반대 의견이 나왔다고 밝힘
- 여야 모두 입장 변화가 없기 때에 2 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규제 관련 법안의 처리는 불투

## 2. 정부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백지화

## 01

## 개요

보도형식	언론기사	보도일자	2018.01.05
보도대상	전국	보도매체	머니투데이

## 02

## 주요내용

### ■ 정부가 수도권 잔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하지 않기로 결론

- 4 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다음 달 1 일 발표할 ‘새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 및 전략’ 에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방안을 담지 않기로 했음
- 정부 관계자 :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은 사회적 갈등 가능성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중장기 전략에서 제외한 것은 사실상 현 정부에서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
-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필요성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여권과 국토교통부 등 정부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
- 참여정부 이후 새롭게 설립되거나 지정된 공공기관 중 수도권에 위치한 곳이 대상
- 민주당 이해찬 의원실
  - 한국전력, 가스공사, 도로공사, 주택토지공사 (LH) 등 151 개 공공기관을 △강원 (원주) △경남 (진주) △경북 (김천) △광주·전남 (나주) △대구 △부산 △울산 △전북 (전주) △제주 △충북 (음성·진천) 등 혁신도시 10 곳으로 분산 이전시키기로 확정된 2005 년 6 월 이후 지난해까지 서울·경기·인천 등 수도권에 새롭게 설립되거나 지정된 공공기관은 모두 152 개
  - 이 가운데 예금보험공사, 산업기술진흥원 등 122 개가 추가 지방이전 대상으로 거론
  - 근무인원만 5 만 8000 명에 달함
- 실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18 조에는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
  - 다만 지역난방공사나 환경공단,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, 인천공항공사 등과 같이 업무 관할 구역이 수도권이거나, 수도권 주민의 문화생활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, 수도권에 있는 문화유적지, 묘지, 매립지, 남북출입장소, 방송시설, 철도역, 공항 및 그 관련 시설 등을 관리하는 기관 등은 지방이전 대상에서 제외
- 정부가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을 백지화한 것은 균형발전정책의 초점을 내실화에 두겠다는 의미로 풀이
-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혁신도시의 물리적 기반 조성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혁신도시를 실제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하는데 집중하겠다는 것
- 실제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등
  - 혁신도시를 지역혁신 거점으로서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정·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
  - 기능적 측면에서 혁신주체들이 협력하는 산·학·연 혁신생태계 구축하고 입주기업에 세제 감면·입지규제 완화·국가 R&D(연구개발) 지원 등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게 핵심
- 특히 일각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 의석수 122 석 중 82 석을 확보하면서 수도권 지지기반이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을 추진하는데 대한 정치적 반발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옴

## 3. 민주, 규제프리존법 대안 '4 대 패키지법' 준비..."2 월 국회 처리 "

## 01

## 개요

보도형식	언론기사	보도일자	2018.01.07
보도대상	전국	보도매체	연합뉴스

## 02

## 주요내용

### 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 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' 규제프리존 특별법 ' 대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

- 정부·여당은 현재 야당이 내놓은 기존의 규제프리존법안을 독소조항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면서 '4 대 패키지법' 으로 준비한 대안 입법을 준비 중
- 다만 제 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이 내놓은 규제프리존법안을 고수할 가능성이 커 2 월 국회 입법화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
-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 7 일 연합뉴스와의 통화
  - 규제프리존법의 대안을 마련하려고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정부 각 부처에서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며 크게 4 개 영역으로 쪼개서 준비 중
- 정부는 구체적으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, 금융혁신지원법 제정, ICT(정보통신기술) 융합특별법 개정, 지역혁신성장특별법(기존 지역특구특별법 개정) 마련 등 4 개의 큰 물줄기로 나눠 규제프리존법안의 대안을 마련
  - 산업융합촉진법: 시범사업 신청·추진과 관련한 제도 및 산업 융합 제품·서비스의 지원사업 등을, 금융혁신지원법은 핀테크 분야 규제 등을 다룸
  - ICT 융합특별법: 현재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아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신기술·신서비스의 특례 부여 등
  - 지역혁신성장특별법: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신기술 지원 및 지역혁신성장특구 지정·운영, 세제재정 지원 등에 각각 초점
-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
  - 기존 규제프리존법안은 조문이 95 개나 될 만큼 덩어리가 컸으며, 게다가 한 바구니에 한식, 일식, 중식이 한데 뒤죽박죽 섞여 있었던 상태라 현재 한식은 한식대로, 일식은 일식대로 정리하는 단계
  - 기존 법안을 보면 독소조항도 제법 많고 핀테크 등 발의 당시에 포함되지 못한 영역도 있어 정비가 필요한 상황
-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별 전략사업을 키우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거 푸는 것이 핵심으로, 19 대 국회에 이어 20 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쟁점 법안
  - 박근혜 정부와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19 대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규제프리존법을 내놨으나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독소조항이 많고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며 강력히 반대
  - 20 대 국회 들어서도 한국당이 규제프리존법을 다시 당론으로 발의했으나 여권은 반대 입장을 고수
  - 그러나 보수야당뿐 아니라 여소야대 지형에서 '캐스팅 보트' 를 쥐 국민회의당도 규제프리존법 처리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민주당은 그동안 대안 마련을 고민
- 여권은 이르면 1 월 중 규제프리존법 대안을 정비해 2 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
- 당 관계자
  - 규제혁신 관련 종합적인 대책과 대안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정부에서 현재 대안을 검토
  - 2 월 국회에서 야당이 규제프리존법 얘기를 꺼낼 것으로 보이는 만큼 거기에 대응해 나가는 일이 중요

## 4. 김동연 ‘일자리 위해서라면 패키지로 규제 풀것’

## 01

## 개요

보도형식	언론기사	보도일자	2018.01.08
보도대상	전국	보도매체	dongA.com

## 02

## 주요내용

■ **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까지 포함하는 전향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힘**

- 김 부총리는 5일 동아일보의 신년기획 시리즈 ‘새해 경제장관에게 듣는다’ 인터뷰를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본보 취재팀을 만나 이같이 밝힘
  -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앞으로 한국 경제가 가야 할 신산업 분야에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를 한다면 수도권 규제를 포함한 각종 규제를 패키지로 풀어 줄 것
  - 1982년 도입된 수도권 규제는 한국 기업들의 성장과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라는 지적을 받았음
  -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, 성장관리권역, 개발제한권역,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쪼개 새로운 공장 건설 제한, 부담금 부과, 4년제 대학 신설 억제 등의 족쇄를 채워둔 것
  - 한국경제연구원은 이 규제가 풀려 해외에 나간 한국 기업 중 10% 만 국내로 돌아와도 일자리 29만 개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음
-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
  - 특정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형식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
  - 기득권 집단이 아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혁신성장 분야의 산업에 혜택을 줄 것임을 분명히 함
  -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고용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났지만 취약계층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옹호
- **현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이 지난 정부의 창조경제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**
  -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: 과거 정부에서 한 정책이라고 좋은 것까지 배척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

## 5. 정부 균형발전 뒷받침할 균특법 개정안 '낮잠'

## 01

## 개요

보도형식	언론기사	보도일자	2018.01.15
보도대상	전국	보도매체	중부일보

## 02

## 주요내용

■ 문재인 정부가 다음달 세종시에서 국가균형발전비전을 발표하는 가운데 정작 이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낮잠

- 정부 올 국정기조인 '국민의 삶' 과 직결된 균형발전 로드맵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해당 법률안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
-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1 일 세종시와 공동으로 세종호수공원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(SCC) 등에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개최
  - 이날 선포식에선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부 의지를 천명하는 선포문이 공개되며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인 '사람이 먼저다' 라는 기조에 입각한 큰 틀의 균형발전 전략도 베일을 벗을 전망
- 전 국민과 각 지역의 차질없는 균형발전정책 지원을 위해선 법률을 통한 지원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데 이견은 없으며, 이같은 맥락에서 볼 때 국회에서 지난해 9 월 발의된 균특법 개정안이 수개월 째 표류하고 있는 점은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
-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
  - 이 법안은 전체 국토면적 11.8% 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, 경제력 쏠림현상을 막고,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의 발전기반 구축을 위함
    - 국가균형발전 정책 지원체계의 재정립과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육성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다음달 공개될 정부의 균형발전비전과 맞닿아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음
    - 구체적으로 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지역위의 명칭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균형발전정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
    - 각 시·도의 경우 지역혁신협의회와 지역혁신지원단을 설치하고, 지역 발전 계획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앙부처와 계약을 맺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선 지원
    - 또 관할구역의 혁신도시와 인근 산업단지 등을 연계,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을 신청할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결에 따라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
- 지난해 9 월 발의된 이 법안은 11 월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된 뒤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졌지만, 이후 정치권의 지리한 정쟁 탓에 표류를 거듭
  - 문재인 정부 출범초부터 인사문제 등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워온 여야가 지난해 말까지도 아랍에미리트연합 (UAE) 특사파견, 개헌시기 등을 둘러싸고 감정의 골을 키우면서 민생법안 처리를 뒷전으로 미뤘기 때문
  - 30 일부터 한 달간 열리는 2 월 임시국회에서도 이같은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면 균특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처지
  - 자칫 다음달 1 일 세종시에서 열리는 국가균형발전비전 선포 의미와 효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으로 정치권의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 시급
- 지역위 관계자
  - 이 법률안은 국가 백년대계인 균형발전을 위한 것으로 정치권이 균특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

## 1. 말로만 떠드는 기업유턴 정책 ... 일자리 300 만개 해외에서 떠돈다

## 01

## 개요

보도형식	언론기사	보도일자	2018.01.04
보도대상	전국	보도매체	MK 매일경제 MBN

## 02

## 주요내용

■ 선진국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외에 진출한 자국 기업을 되돌리는 '유턴' 정책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한국은 역주행

- 말로는 유턴 지원을 외치지만 각종 규제와 부족한 지원 등으로 인해 기업들 마음을 돌리지 못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
- 4 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실
  - 2014 년부터 지난해 9 월까지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41 개에 그침
  - 그나마 2013 년 말 유턴기업지원법 발효 이듬해인 2014 년에 22 개 유턴기업이 몰렸을 뿐 2016 년을 제외하곤 매년 유턴기업 수는 한 자릿수를 기록
  - 지난해에는 7 월 말까지 유턴한 기업이 3 곳에 그쳤음
- 그나마도 대기업 유턴 사례는 전무
  - 대부분 신발, 보석 가공 업체와 같은 중견·중소기업
  - 더욱이 국내 복귀에 성공해 공장을 정상 가동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 유턴기업 (41 개) 의 절반인 21 곳에 불과
-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2016 년 수출실적 50 만달러 이상인 1 만 6013 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
  - 해외에 생산거점을 둔 기업 가운데 해외에 생산시설을 확대할 의사가 있는 기업은 절반에 가까운 49.1% 에 달했지만, 유턴을 고려한다는 회사는 4.7% 에 그쳤음
- 기업 유턴 활성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
  - 2015~2016 년 국내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 (FDI) 증가율은 연평균 6.6% 로 국내 투자 증가율 (3.3%) 의 2 배
  - 같은 기간 제조업 분야의 해외 생산 의존도도 12.8% 에서 19.2% 로 급증
  - KOTRA 의 해외 기업 통계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해외 인력만도 300 만명을 넘음
  - 국내 청년 실업자 (41 만 7000 명) 의 7 배를 넘는 수치
- 하지만 말로만 '유턴' 을 외칠 뿐 지원 대책은 걸들고 있음
  - 우선 유턴기업에 대한 법인세, 소득세 지원은 해외 사업장을 청산하거나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는 조건이 따라붙음
  - 일단 국내에 기반을 마련한 뒤 현지 사업체를 청산하길 원하는 유턴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상충
  -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'비즈니스 환경' 이 유턴기업에 매력적이지 않다는 점
  - 당장 수도권 규제로 인해 수도권으로 유턴하려는 기업은 고용보조금 외에 임차료, 법인세 감면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없음
  - 여기에 더해 최저임금 인상, 근로시간 단축,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같은 비용 상승 요인이 커지면 유턴 활성화는 더 멀어질 것이라 우려가 제기



## 2. 인천시, 수도권 규제완화 최대 수혜지로 부상하나

## 01

## 개요

보도형식	언론기사	보도일자	2018.01.08
보도대상	전국	보도매체	중부일보

## 02

## 주요내용

■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전향적인 개혁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각종 규제 소외 받아온 인천지역이 최대 수혜지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

- 인천의 성장은 전국 최초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이 견인하고 있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제한이 불가피했고 지방균형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으로 인해 역차별 논란이 컸음
  -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
  -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까지 포함하는 전향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
  - 신산업 분야에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를 한다면 수도권 규제를 포함한 각종 규제를 패키지로 풀어줄 것
- 앞서 1982년 도입된 수정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등으로 나눠 대규모 공장 건설을 제한하고 부담금을 부과해 발전을 억제
-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과 항만, 경제자유구역, 군사접경지역 강화·옹진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와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 규제 완화를 수습차례 요청
  - 또 한발 물러서 지역 전체에 대한 완화가 어렵다면 경자구역에 한해 수정법 적용 예외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강조
-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인천의 중심 성장지역인 경자구역 활성화와 함께 항공·항만 산업 발전이 기대
  - 규제 철폐로 투자 활성화와 전략 산업 유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
- 국내 경자구역 외국투자자본 유치금액의 70% 이상의 비율을 인천이 차지하고 있지만 금액은 그리 크지 않지만 향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음
  - 수도권 규제로 인해 지난 10여년 간 인천경자구역에 신고된 금액은 약 78억 9천만 달러지만 들어온 금액은 약 39억 3천만 달러에 불과
- 지방도시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되고 있는 '규제프리존특별법'에 대한 우려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임
  -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전략 산업을 지정해 규제를 풀어주는 것인데 인천의 8대 전략 산업과 상당수 겹쳐 인천소외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
- 이와함께 같은 서해권 경자구역인 새만금과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측
  - 올해 국비 지원이 84% 폭증한 새만금 경자구역은 41%의 국비가 줄어든 인천 경자구역과 비교돼, '인천 패싱'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
- 기획재정부 관계자
  - 혁신 성장 분야 일자리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 얘기가 나오고 있다"며 "실무적으로 검토가 필요

## 1.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대신 산학연 클러스터 내실화 주력 예상

## 01

## 개요

보도형식	언론기사	보도일자	2018.01.08
보도대상	전국	보도매체	영남일보

## 02

## 주요내용

### ■ 정부 향후 대책은 당초 취지에 맞게 목표 설정 균형발전·자족도시로 건설

-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은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을 각 시·도에 분산 배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,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
- 정보통신정책연구원 (KISDI) 김경복 연구위원
  - 2005년 약 3만 3천명이 이전한 프랑스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지역 이미지가 향상되고 지역 대도시 역할이 강화됐음
  - 더불어 지역고용도 활발해져 연구계약, 산학연 파트너십 등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음
- 2003년 시행된 아일랜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전국 53곳에 직원 1만 300명을 이동시켰음
  - 당시 사회 곳곳에서 불만이 표출됐지만 해당부처 장관들의 리더십으로 현명하게 대처, 지역사회 발전과 직원후생복지에 초점을 뒀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·실천
  - 그 결과 직원의 이직률 감소 및 근무생산성 향상, 민간분야의 참여 증가 등이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낼 수 있었음
- 국토연구원
  - 국내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지방에 약 13만 3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, 연간 약 9조 3천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연간 약 4조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기대
- 송진섭 대구대 교수
  - 수도권 집중의 근원적 해소와 지방육성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불가결의 선택
  -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방분권화 정책과 병행돼 추진돼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
- 초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혁신도시를 설계한 성경룡 한림대 교수
  - 그동안의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 중심의 부동산 개발에 치중해 정책 본연의 목적이 사라졌음
  - 당초 취지에 맞게 국가균형발전과 자족도시 건설이라는 정책 목표를 방향으로 잡고 가야 함
  - 공공기관 입주 완료를 사업 종결로 인식하는 것 같은데, 사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
  - 산·학·연 혁신클러스터 확충이 혁신도시 성공의 핵심
- 실제 현재 전국 10개 혁신도시내 공공기관 이전율은 90% 넘는 반면, 지난해 9월 현재 산·학·연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은 60.5%에 그치고 있음
-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산·학·연 클러스터를 조성해 내실화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제기
  - 실제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등은 혁신도시를 지역혁신 거점으로서 '국가혁신클러스터'로 지정·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
  - 기능적 측면에서 혁신주체들이 협력하는 산·학·연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입주기업에 세제 감면·입지규제 완화·국가 R&D(연구개발) 지원 등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게 골자